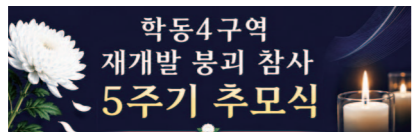


광주 동구 '학동 참사' 추모 공간 마련된다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5주기 추모식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붕괴 참사 5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공간 조성 계획이 공개된다.

9일 오후 4시 10분 동구청 광장에서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참사 5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추모식에는 학동참사 유가족과 지역 정치인 인사, 시민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재난 피해자들로 구성된 416합장단도 함께해 재난 피해자 간 연대와 치유의 의미를 더한다.

특히 올해 추모식에서는 참사 발생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추모공간 조성안

오늘 오후 추모식서 공식 발표...330㎡ 규모 조성 버스 보존은 제자리...유가족 "기억 공간 마련을"

이 공개된다. 재개발 사업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은 추모식에 앞서 유가족들에게 계획을 설명한 뒤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추모공간은 학동 재개발 단지 내 광주천과 학동행정복합센터를 연결하는 녹지축에 조성된다. 약 330㎡ 규모로 마련되는 공간에는 희생자 9명을 상징하는 나무와 돌, 기둥 형태의 조형물이 설치되며, 원형 산책로를 중심으로 추모와 휴식 기능을 함께 갖춘 공간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조형물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지

고, 동백나무와 태산목, 산딸나무 등 계절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수종이 식재될 것으로 알려졌다.

원형 구조는 끊어지지 않는 기억과 생명의 연속성을 상징하며, 시간이 흐르면 서 변화하는 조경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의미를 담는다는 구상이다.

유가족들은 추모공간 조성 계획이 구체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고 버스 보존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고 버스는 참사 이후 증거물 보존 질

자를 거쳐 현재 광주 북구 각화정수장 내 시설에 임시 보관 중이다. 그러나 별도의 전시·보존 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5년째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각화정수장 부지 역시 향후 공원 조성 계획이 예정돼 있어 장기적인 보존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가족들은 사고 버스를 단순한 보관 대상이 아닌 안전교육과 재난 기억을 위한 상징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조성된 시민안전테마파크처럼 시민들이 참사의 교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교육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진의 학동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추모공간 조성 계획이 마련된 것은 의미 있는 진

전"이라며 "참사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고 버스 역시 안전교육과 기억의 상징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보존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동구 관계자는 "5주기 추모식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비극적인 사고가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자리"라며 "참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동 붕괴 참사는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2분께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발생했다.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17명이 피해를 입었고, 이 가운데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맑음	05:18	달림	00:55
맑음	19:46	달림	13:12



광주	☀️	15~29
목포	☀️	16~26
여수	☀️	16~26
순천	☀️	15~27
구례	☀️	13~28
광주	☀️	14~27
신도	☀️	15~27
흑산도	☀️	17~24
진남	☀️	14~27
진도	☀️	14~26

목포	밀물 (고)	08:00 / 20:37
	썰물 (저)	00:50 / 13:45
여수	밀물 (고)	02:57 / 15:51
	썰물 (저)	09:35 / 21:39

업주 협박·금품 뜯어낸 50대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를 받

미로 식당 업주를 협박해 돈을 받아내고, 추가 금품까지 요구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고장엔 재판장은 공갈,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A씨(53)의 항소를 기각.

A씨는 지난 2022년 2월과 3월 사이 광주 서구 일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협박해 3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

신용불량 상태였던 A씨는 피해자의 배우자 B씨의 통장을 빌려 사용하다가 실직하자 '실업급여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신청하라', '돈을 주지 않으면 B씨를 위장취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

또 A씨는 2023년 11월 10일 한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B씨를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신고한 사실을 언급하며 '근무한 것으로 진술해 주겠다. 2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임영진 기자 looks@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폐업...근로자 해고 정당"

법원, 사업 폐지 따른 통상해고 판단...적법성 인정

광주시립제2요양병원이 위·수탁 계약 종료에 따른 폐업으로 간호사 등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양상운 부장판사는 최근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전 직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시는 시립제2요양병원 운영을 위해 2013년부터 10년간 전남대학교병원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병원 관리·운영을 맡겨왔다.

그러나 병원 경영 악화와 누적 적자가 이어지면서 전남대병원은 계약 만료를 앞

두고 광주시에 위·수탁 종료 의사를 전달했다. 이후 계약 기간이 2023년 말까지 연장됐지만 새로운 수탁기관을 찾지 못하면서 병원은 지난해 1월 1일자로 폐업했다.

병원 측은 2023년 11월 노조와 직원들에게 '광주시의 위·수탁 계약 종료 결정으로 병원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근로관계도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직원들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됐고, 직원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역시 노동위원회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경영상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가 아니라 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임영진 기자



모내기하는 농민 8일 전남 나주 신평면 들녘에서 한 농민이 이앙기로 모를 심고 있다. 모내는 시기는 지역·품종·기상환경·이앙기의 활용·노동력의 확보 등에 따라 달라지며 중부지방은 6월 하순, 남부지방은 7월 상순 전에 실시한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지역 대학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집단 반발

"참정권 침해" 한목소리...진상 규명·재발 방지 촉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광주·전남 지역 대학 총학생회들이 잇따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 침해 문제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8일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에 따르면 오는 9일 오후 4시 광주캠퍼스에서 학생총회를 개최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탄 결의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총학생회는 "우리 대학이 걸어온 민주주의의 역사와 정신을 되새기고, 많은 학생들이 수업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남대의 정신을 계승해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자'고 호소했다.

앞서 전남대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는 지난 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는 우리 대학

선배들과 수많은 시민이 지켜낸 오월 민주주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와 다름없다"며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선대 총학생회도 성명을 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을 비판했다. 학생회는 "국민이 행사한 한 표의 무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행정적 준비 부족으로 국민의 권리가 제약받는 상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 이어 "선거 관리의 기본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번 사태를 가법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전남 노동단체 "고흥 양식장서 이주노동자 착취"

경찰 엄중 수사·법무부 권리구제 협조 등 촉구

고흥군의 한 굴 양식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장기간 임금 체불·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등은 8일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흥군 굴 양식장에서 근무한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 3명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 착취를 당했다"며 "근로계약서 내용과 달리 굴 가까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 방식의 임금을 받았고, 정기휴일도 없이 초과근

로·휴일근로 수당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경찰, 법무부 등에 엄중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부를 쌓는 나라가 돼선 안 된다"며 "최소한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경찰은 사용자와 브로커들을 엄중히 수사에 처벌해야 하고, 법무부는 피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청신호'

나주공고·광주공고·동일미래과학고 '협약형 특성화고'

학교당 5년간 최대 45억...지역 정주형 기술인재 육성

전남·광주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3곳이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에 선정돼 향후 5년간 학교별로 최대 45억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갑)은 8일 전남·광주 소재 3개 학교가 교육부가 추진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신규 지정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선정된 학교는 광주공업고등학교, 동일미래과학고등학교, 나주공업고등학교다. 광주공고는 스마트엔지니어링 분야, 동일미래과학고는 인공지능(AI) 분야, 나주공고는 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학생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모델이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 특성화고가 협약을 체결해 연합체를 구성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한 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선정 학교에는 5년간 최대 45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며,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도 보다 폭넓은 자율성이 부

여된다.

교육부는 지역 정주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24년부터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지난해까지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단 한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김문수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주·전남 지역 학교가 협약형 특성화고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지역 균형을 고려한 선정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가균형성장 측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웠다"며 "이번 선정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행정의 결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조선이공대·동일미래과학고 '호남·제주권사업단' 선정

직업계고·전문대·기업 연계...4년간 최대 40억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 선도대학 지원사업'에 조선이공대학교와 동일미래과학고가 참여하는 호남·제주권 사업단이 최종 선정됐다.

8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직업계고와 전문대학 간 교육과정을 연계해 전문학사 취득 기간을 최소 1학기 이상 단축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전문기술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전국 21개 사업단을 대상으로 사업 목표와 교육과정 연계 체계, 운영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수도권,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충청·강원, 호남·제주 등 5개 권역 사업단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사업단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 2030년 2월까지 4년간 지원받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사업단별 10억원씩 총 50억원이다.

호남·제주권 사업단은 조선이공대학교와 동일미래과학고, 3개 기업(세방리튬배터리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계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된다.

선정된 사업단들은 직업계고 교육과정과 전문대 전공과목을 연계·분석해 고

교에서 이수한 과목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학생들은 고교학점제 연계 과목이나 대학 학점 선이수제(AP) 등을 통해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아 조기 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또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대학·기업 탐방, 1대1 진로 상담, 장학금 지원 등이 제공되며, 전문대 진학 이후에는 산업체 연계 프로젝트와 현장실습, 인턴십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조선이공대학교는 학생별 선이수 학점 수준에 맞춘 맞춤형 학점 관리와 졸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업 기간 단축과 취업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